

“퇴직자 출자회사 전우실업에 2675억원 규모 일감 몰아줘”

국감초점 - 한전·한전KDN

5일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전과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방만한 경영이 주로 지적됐다. 또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5개 중 1개기업은 페이퍼컴퍼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방만한 경영 질타=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공기관 자회사 중 일부는 적자 규모가 14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한전KPS, 한전KDN,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 등 4개의 전력기업 및 전력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산하 자회사 및 출자회사 52개 중 18개사가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당기순손실이 13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52개사 중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당기순이익을 낸 적이 없었던 회사도 3개나 됐다.

이 의원은 “한전 및 전력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은 되레 18개사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폭리를 취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자회사 경영부터 똑바로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현 의원도 이날 “한전은 2016년 자회사인 한전KDN과 퇴직자모임 출자회사인 전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각각 94억 원, 540억 원 규모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한전KDN은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323건 수의계약으로 한전으로부터 모두 1천162억 원 규모의 일감을 받아냈다. 한전 퇴직자모임 출자회사 전우실업도 2012년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한전과 8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모두 2675억 원 규모 일감을 받아냈다.

반면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의 전체 파견직원 중 절반 이상이 20대 청년이며, 최근 5년간 인명사고의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이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금주

18개사 1370억 당기순손실...자회사 방만 경영 질타

최근 5년 인명사고 74% 협력업체 직원·일용직 발생

국회의원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 전체 파견직원 379명 중 57.2%인 217명이 20대 청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전KPS는 고급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비핵심 단순 정비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전사고는 비정규직에게서 집중 발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 안전사고 47건 중 35건(74.4%)가 협력업체 직원이나 일용직들에서 발생했다.

◇한전 배전공사 페이퍼컴퍼니 시공 의혹=한전의 배전공사 시공사업을 따낸 업체들 중 업체명은 다른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같은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상으로는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상당수 선정됐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중복 낙찰이 금지된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선정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2015~2016년 사이 추정 도금액 1조8000억원 규모의 한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5개중 1개꼴로 ‘업체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같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체 시공업체 중 20%가량이 페이퍼컴퍼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5~2016년까지 2년간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탄 배전공사 협력회사는 총 757개 업체로 이 가운데 20%인 147개 업체는 회사 기본 정보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에서도 5개 부문(총 192억)을 낙찰 받은 업체들의 경우 4곳은 주소가 일치했고, 한 곳은 주소만 달랐고 전화번호는 일치했다. 경북에서도 5개 부문(총 120억원)을 낙찰받은 업체들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모두 일치했다.

박 의원은 “한전이 ‘배전공사 협력회사 업무처리기준’을 적용, 중복 낙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출 서류 검토 외에 제대로 된 실사를 벌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다수의 업체를 소유하면서 중복해서 사업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사전에 이런 경우를 찾아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국감현장

국회는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로 복귀한 지 이틀째인 5일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상임위 11곳에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으로 파행됐던 일정이 재조정되면서 정부위원회 국감이 추가됐다.

野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인가 허위서류 제출”

◇정무위=지난달 26일 일정이 잡혔다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정감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허위서류를 제출했는지를 놓고 야당의 추궁이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설립인가 신청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취사사유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허위서류를 제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경련이 두 재단의 주인도 아닌데 문제가 확산되니까 부랴부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새누리 최경환 의원 인사청탁 의혹 30분간 입씨름

◇기획재정부=기재부 국감에서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이 최 의원의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뒤집은 점을 두고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30분간 설전을 벌였다.

더민주 박광문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동안 해온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 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

언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또 최 전 부총리 스스로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거나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재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날 국감이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따지기 위한 자리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최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룰 사안이라고 맞섰다.

“김재수 대출금리 1.42%는 고객 57만명중 최저 금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 대출 ‘최저금리’에 대한 논란이 재연됐다.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이날 김재수 장관의 대출 금리와 관련해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도 상상할 수 없는 초호화 황제금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김 장관에게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로, 한 언론은 지난 8월말

현재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57만5000명을 통틀어 가장 낮은 금리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농협 국감을 하는 날 대출 금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면서 “한겨레신문에서 김재수 장관 대출이 1등이라고 보도됐는데 김재수 장관보다 낮은 금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사드 배치 막대한 예산 들어가 국회 비준 필요”

◇국방위=이날 현정점검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지난달 27일 소회하지 못한 국방부 대상 국정감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사드 배치될 경북 성주 달마산에 위치한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이철희 의원은 “주민들의 요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비준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일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전의 전기료 누진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난 4월13일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광주·전남에서 247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대 총선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만인 오는 13일로, 이 날을 넘기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5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광주와 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82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 24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일주일 앞 광주·전남 45명 수사·내사중

여전히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 사범은 37명이며 8명은 아직 내사중이다.

이날 현재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당선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지만, 당선자와 관련해 4명이 입건됐고 1명이 내사중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지검과 목포지청에서 각 1명씩, 순천지청에서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

존비속 등이 입건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가 되는 당선인도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이번 20대 총선과 관련한 광주·전남 선거사범은 19대 총선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에서 입건된 247명은 지난 19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351명에 비해 29.6%가 감소한 것이다. 이 가운데 광주의 경우 19대 총선에서 197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데 비해 이번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위반 사범은 103명으로 47.7%나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는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28.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경이로운 수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TAEYOUNG 21 HOSPITAL

태영21 병원

인공신장센터 **오픈**

9월 1일

홈페이지 | www.ty21-endo.com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신장실 | 직통
070-4165-7573

광주신세계백화점 건너편(국민은행 2F)

운암동

광천사거리 | 광주천변로

유스퀘어 터미널 | 신세계 백화점 | 태영21병원 | 백운동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